

정부, 원전수출 첫걸음 돕는다

5년간 기업당 20억 금융 지원

산자부 원전기업 밀착 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 제공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목표”

정부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설비 중소·중견 수출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초보 원전설비 기업에도 밀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 진출 시킨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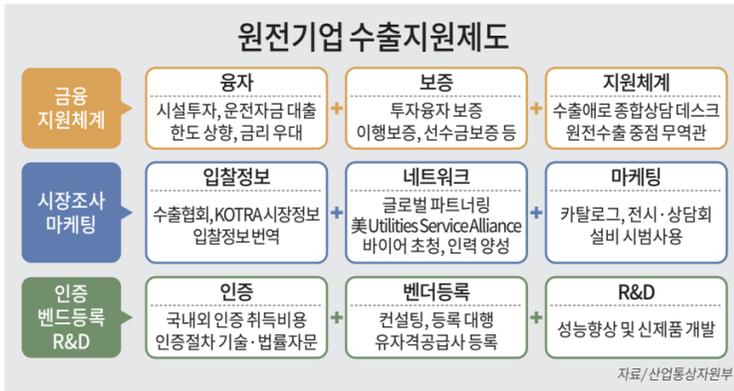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이 목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국들의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 제조 능력이 약화된 상태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린 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은 57기로 1년 전보다 4기 늘었고, 계획중인 원전도 100기로 같은 기간 5기가 추가됐다. 또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이 전세계 원전의 66%를 차지해 원전 설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 3000만달러 수준으로,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건수 기준 9%에 불과하고 수출품목도 공조기, 밸브 등 비핵심 보조기기 중심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



이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과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월께 10개사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누적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설비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40개사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마케팅·인증/등록·금융 등의 분야별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해 기존 지원사

업과 차별화 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기관 간담회를 개최,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승철 원전산업정책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장기금리 상승, 美 국채 영향”

한은 주담대·조달금리 추가상승 지적
“美 국채금리 움직임 면밀히 살펴야”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음에도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의 조달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한·미 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묶은 이후인 지난 4월 말 3.36%에서 지난 8월 말 3.82%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42%에서 4.11%로 오른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랜시간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며 “특히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어 질수록 뚜렷하게 미국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물 한미 국채금리의 상

관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0.57에서 위기 이후 0.7로 높아졌다. 계수가 높을수록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다만 1·3년물 등 단기물의 금리는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한국 국고채 금리에 대한 영향은 3개월물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년물은 19%에서 14%로 축소됐다.

반면 10년물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56%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장기물과 연계되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질 수 있다”며 “미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석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수요 급증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여행상품 예약률은 지난 여름휴가 성수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시스

밀수·드론 등 비정상적 제품 유통시 ‘속수무책’

» 1면 ‘화웨이, SK하이닉스...’서 계속

문제는 현지 대리점이 ‘작정하고’ 빼돌렸을 경우다. 만약 이상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의 문제도 거래가 끊기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고 화웨이와 몰래 거래를 했다면 사전에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제3국을 경유해서 들였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나 북한 등 미국 규제를 받는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반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들고 있다. 최근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메모리 공급사가 중국 대리점과 마

찬가지로 철저히 검증을 거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감수하고 몰래 빼돌렸다면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유통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규제 이후 홍콩이나 마카오와 국경 지역 보따리상을 통해서까지 반입이 불가능한 반도체와 장비 등을 밀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공 비행 드론까지도 동원한다는 소문까지 돈다. LPDDR5D 램이 범용 제품이라 가능하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모듈을 해당 D램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

한편 화웨이는 메이트60프로에 이

어 신형 폴더블폰인 메이트X5 출시도 예고한 상태다. 7나노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린9000s 탑재 가능성이 높다.

중국 현지 소비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지 매체 등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린9000s가 7나노 공정이면서도 EUV가 아닌 DUV를 쓴 탓에 충분한 수율을 내기도 어렵고 생산 비용도 일반 7나노 반도체 대비 몇배가 비싸기 때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

“감사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1면 ‘사내이사 독립성...’서 계속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하려 하지만, 이들을 선임할 때부터 지배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예를 참고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상근하는 감사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업무집행하는 이사회 하부조직으로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을 감사로 별도 규정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

장기업에는 감사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됐다.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경남은행의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총회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독립성이 없다면 감사의 제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